

참여

정 범 진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최 근 ‘참여’라는 단어는 곧잘 인구에 회자된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에서 목적어가 불분명한 것과 같이, 주어, 즉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하는지가 불분명한 표현이다.

물론 강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호한 표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는 표현일 것이다. 물론 우리는 별 생각없이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이상한 표현을 따라 쓰기도 한다.

불필요한 국민의 우려 자극은 국력 낭비

흔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면, 그 가운데 시민 단체 그리고 반핵과 반원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전문가 집단의 보다 심층적인 검토로 이어진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최초의 결론이 달라진 적은 없다. 당초의 결론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의지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논란은 당초부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다만 붉어진 여론에 대한 성의 표현으로 전

문가 검토의 장이 마련 것일 뿐이다. 괜한 의혹의 상처만 남기고 불필요한 국민의 우려를 자극한 셈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걱정거리가 아닌 것으로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국력의 낭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는 법에 의해서, 즉 국민에 의해 임무가 부여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의해서 임무가 부과된다. 이들의 자격은 채용 과정에서 또 승진 과정에서 검증된다.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산하 기관은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전문성이 검증되며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의해 임무를 부여받는다.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자격과 임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부여받은 임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는 감사원과 국회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물론 시민 단체에 의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이러한 공식적인 감시 기구에 입력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감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정부의 인허가, 규제, 정책 결정, 기획 등에 시민 단체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엇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 쉽사리 납득되고 힘을 얻는 현실은 뭔가 답답하다.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원전이 건설되고 운전됨에 따라서 지역의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왜 짓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사 결정의 과정이 무엇인지는 공개하라고 주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까? 이들은 국민의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만일 감시가 필요하다면 감사원과 국회가 할 일이지 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이들의 주장은 공식적인 감시 기구에 입력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다.

무리한 정보 공개 요구

민주주의 국가에도 비밀은 있다. 모든 비밀을 밀실 행정으로 치부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주장이다. 정보가 공개되어 만민이 알게 되면 정보가 아니라 상식으로 바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있고 공개되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리한 다수에 의하여 정부 정책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구비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지만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대의 기구인 국회에서 내린다. 혹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그런데 마치 “정보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 쉽사리 납득되고 힘을 얻는 현실은 뭔가 답답하다. 또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슬슬 피해나가려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은 점점 정글화 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 같다. 마치 국민 투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결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주장이 될 것 같다.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원전이 건설되고 운전됨에 따라서 지역의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왜 짓는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사 결정의 과정이 무엇인지는 공개하라고 주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